文케어 영향?… 1분기 실손보험 손해 전년比 19%↑

실손보험 손해액 2조6000억원
의료비 증가로 보험금 지급상승
"비급여 의료비 통제 노력 필요"

최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치솟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비급여 의료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액은 8조7300억원으로 전년(7조5500억원) 대비 15.7% 증가했다. 손해액 증가 추세는 최근 더 빨라지면서 올해 1분기(2조6000억원)는 전년 같은 기간(2조1900억원) 보다 19.0%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 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및 보험급여비〉 (단위 조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2	63.2	63.4	62.6	62.7	-
보험급여비	40.3	42.5	46.5	51.1	55.5	60.6
수지율(지출/수입)	91.9	87.6	92	94.4	98.8	100.3

/자료=보험연구원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최근 건강보장 강화 정책에서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포함하고,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는 본인부담액 비중이 높은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접근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총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통 진료비의 70%)와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구성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진료를 행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세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7.2%로,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약 60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9%) 증가했다. 이러한 급여비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은 2018년 수지율(지출/수입)이 100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 증가율을 0%로 가정하면 보험급여비 5조1000억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포인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를 확대하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간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 기관에 의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한도 미리 조정하고 결제알림문자 신청을

금감원 Q&A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Q.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일일이 현지 통화를 사용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휴가 경비를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유용한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최근 해외에서 장기간 휴가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행 전에는 예상경비를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하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두세요.

또 자녀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절대 본인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말고 가족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신용카드 위변조가 쉽고 소매치기 등으로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카드를 사용할 땐 꼭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노점상 등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할 때 바가지요금이 아닌지 결제금액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영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현지 경찰에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국해 카드사에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한 이후에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 또는 해외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를 카드사에 신청하세요. 본인의 카드가 해외에서 복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희주 기자

하나금융그룹, 사회혁신 창업가 키운다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성료
14개 혁신 창업팀 성과 공유

하나금융그룹은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혁신 창업가를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Hana Social Venture Academy)'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최종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하나 소셜벤처 라이브(LIVE)!'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주 동안 진행된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의 맞춤형 창업 교육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이수한 14개의 혁신 창업팀의 성과를 공유했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지주와 하나벤처스,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 한국사회투자,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혁신 컴퍼니 빌더 언더독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14개 팀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 창업팀을 선정, 창업지원금과 함께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하나 소셜벤처 라이브(LIVE)!'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성과 공유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두번째줄 오른쪽 세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지난 8주간의 창업교육이 창업 이후 단단한 밑거름이 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창업 생태계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카드, 반려인 위한 카드 '댕댕냥이'

반려동물 관련 특화 혜택 탑재

우리카드는 국내 1000만 반려동물 집사를 위한 '카드의정석 댕댕냥이'를 지난 2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상품명의 '댕댕냥이'는 '댕댕이(강아지)'와 '냥이(고양이)'의 합성어로서, 친근하면서도 트렌디한 신조어를 네이밍에 활용해 1000만 반려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상품 출시일인 지난 2일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카드의정석' 실물을 본따 만든 기념카드 및 유명 전시회 관람권을 수여했다.

이 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특화 혜택을 탑재했다. 용품샵, 미용샵, 동물병원,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에 입점 중인 몰리스펫샵, 인터파크의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몰인 인터파크 펫, 위비마켓 등에서 10% 청구할인을 제공해 펫팸족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담았다.

지난 2일 '카드의정석 댕댕냥이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에서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가운데)이 대상 수상자 윤주은(왼쪽 첫번째)씨, 최우수상 수상자 박서영씨와 포즈를 취했다. /우리카드

/홍민영 기자

"中 첨단산업 발전 가속화… 韓, 선제적 대응해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들어 성장전략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한국을 비롯해 주요 교역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한 이후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신(新)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이 주목된다.

중국 AI 산업의 시장 규모는 현재 330억위안(50억달러) 수준이다. AI 관련 기업 수는 미국(40.8%)에 두 번째(20.8%)로 많은 1040개에 달한다.

중국의 AI 산업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 세계 AI투자의 70.1%가 중국에서 실행됐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 규모는 육성정책이 공식 발표된 2015년에 비해 약 1.5배 성장한 4385억위안(660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2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신에너지차 산업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중국은 기존 완성차시장이 부진을 보이는 있으나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2014~18년 중 연평균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47.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미국의 중국 IT 기업 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 제조업 부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시장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첨단 제조업 주도권 확보를 꼽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과제로 ▲고용시장의 탄력적 대응 ▲기술선도국과의 마찰 완화 ▲일부 산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꼽았다. /김희주 기자